

| 28일 Market Index |          |             |          |
|------------------|----------|-------------|----------|
| ↓ 코스피            | 8185.29  | ↓ 코스닥       | 1104.36  |
|                  | (-43.41) |             | (-28.77) |
| ↑ 금리 (연이자율)      | 3.766    | ↑ 환율 (원/달러) | 1503.00  |
|                  | (+0.055) |             | (+1.80)  |

반도체 패권경쟁 격화  
삼성·SK 중심  
퀀텀점프 기대  
02



## 전쟁 통에도 韓 GDP 나홀로 독주 지속가능 성장 ‘골든타임’ 만들어야

창간 24th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리부트 코리아

1분기 주요국 중 성장률 1위 ‘남보’ 이스라엘 등 6개국 경제 ‘마이너스’ 韓, 수출실적 세계 5위로 3계단 ↑ 반도체 외 산업이 받쳐주는게 관건

전쟁통에 날아든 남보가 있다. 한국 세계 랭킹의 급상승 소식인데, 그것도 32개 주요국 중 경제성장률 1위다. 코스피는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 대비 불과 5개월 만에 100% 가까이 뛰었다.

경제가 아우토반을 내달리는 형국이다. 관건은 지속가능 여부다. 일단 중동 사태만 해도, 국내 실물경제가 받는 타격이다 소더디게 드러날 수 있다. 하반기 이 시간대를 두고 도처에 파고들 개연성 인 것.

청와대 역시 흐름의 일관·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잠재성장률 관련해 “지금 우하향하다가 우상향으로 살짝 올라왔다”며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나라 경제는 어쨌든 재도약의 계기를 마주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기성장률 집계 마무리 돼 간다. 지난 수년간은 주요국 중 성장률 중위나 중하위권이 더 익숙했기에 현재의 선두 자리가 무척이나 생경하다는 견해도 많다.

올해 1분기 OECD 회원국 29국 중 이스라엘(-0.8%) 등 6개국 경제는 후진했다. 성장률 0%대도 22개국이나 된다. 우리나라

라가 치고 나갔고 단독으로 1%대(1.7%)를 쟁취했다. OECD 29개국 평균은 0.4%, 주요 7개국(G7) 평균은 0.4%, 유럽연합(EU) 평균은 0.2%에 그쳤다. 회원국 총 38곳 중 9곳의 발표만 남겨뒀다.

28일 기준 주요 20개국(G20) 협의체의 3곳(사우디아라비아·인도네시아·중국)까지 합해, 포함 32개국 중 한국이 최상단에 있다.

또 올해 1분기 수출실적 세계 5위에 자리했다. 작년 동분기엔 8위였다. 올해 3월까지 경상수지 흑자도 역대 최대(738억 달러)를 기록 중이다.

국내총생산(GDP) 증가 폭 독주는 어쩌다 터진 단발성 솔로포일지, 아니면 중장기 반등의 예고편이 될지 관심을 모은다.

당장 2분기 수치부터 이목이 집중된다. 서아시아발 여파가 경제 전반에 고스란히 녹아드는 첫 분기이기 때문. 최근 연간 성장률 3%대를 점치는 국내외 기관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 같은 호조의 지속 여부는 4~6월 기간 판가름 날 수 있다.

반도체 외 다른 산업부문에서 받쳐 주느냐가 핵심 관건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반도체와 반도체 이외 제조업의 경기 양극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업종 생산능력지수는 5년 사이 80%포인트(p) 향상됐다. 반면 비반도체 부문의 해당 지수는 14.0%p 뒷걸음질했다.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김광석 경제연

구실장도 “반도체 등 몇몇 산업 아니면 회복세를 실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소비를 가로막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크다. 원화 가치의 곤두박질이 물가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원·달러 환율 10%가량의 상승이 소비자물가를 0.3~0.5%p 밀어 올린다고 했다. 원화는 미 달러화뿐 아니라 여타 주요 통화 대비로도 약세다. 영국 돈 1파운드가 2000원을 넘어섰다. 구매력 저하가 뚜렷하다. 민간소비 등 내수는 살아나지 않은 채 수출이 지탱하는 GDP는 한계가 분명 있다.

정부는 중동전 충격의 완화를 우선 순위로 뒀다. 이에 적극재정 기조를 취하겠다고 했다. 재정을 적재적소에 과감히 투입해 민생 안정·내수 진작을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또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지방수도성장 등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추진 과제로 내걸었다.

국내총생산 시가총액은 1년 만에 다섯 계단 뒀 세계 8위에 올라 있다. 또 그만큼, 이유 여하 막론하고 국민 기대치도 커지고 있다.

지난 1분기 미국과 일본 GDP는 각각 0.5%씩 증가했다. 한국은 이보다 1.2%p 더 늘었다. AI 시대를 맞으며 어느덧 중년을 향하는 21세기, 경제대국의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 기의 갈림길에 섰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창간 24주년 기획기사 2~8면>

## 기준금리 2.50% 유지... 향후 ‘인상’ 무계

한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물가상승 압력 등 고려 인상시기 결정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다만 성장률과 물가 전망을 동시에 상향하고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기준금리 인상 시기를 명시하면서 금리 인하 기대는 한층 약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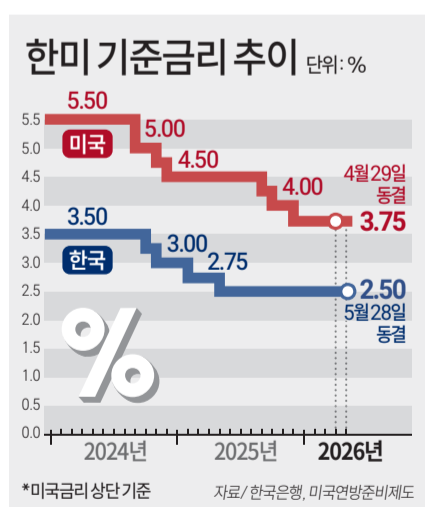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연 2.50%)에서 유지하기로 했다.

금통위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진 반면 성장세는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예상보다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동사태 전개와 파급 영향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현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며 영향을 더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통화정책방향에 따르는 대목은 향후 정책 방향이다. 금통위는 앞으로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 정도와 경기 개선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12면>

인상 소수의견도 나왔다. 이번 결정에 금통위원 5명이 찬성했지만 장용성 위원과 유상대 위원은 기준금리를 2.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경제전망도 금리 인하 기대를 낮추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0%에서 2.6%로 올렸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와 투자 확대, 양호한 소비 흐름이 이어지면서 성장세가 예상보다



크게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물가 전망도 상향됐다. 한은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근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2.1%에서 2.4%로 각각 올렸다.

/김주형 기자 gh471@



오늘부터 6·3지방선거 사전투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직원이 기표봉을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

## “삼성, 성과급 의결은 위법” 주주단체, 무효소송 예고

韓기업 설계구조 방식 전환 분기점 SK하이닉스·LG전자 등도 영향권 투표중지 가져본 결과 이후 소송 진행

삼성전자 영업이익의 연동 성과급이 상법상 주주총회 의결 사항이라는 주주단체의 소송이 재계 전반의 지배구조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운영하는 SK하이닉스는 물론 성과 연동 방식이 다른 LG전자까지 영향권에 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소송 결과가 한국 기업 전체의 성과급 설계 방식을 바꾸는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지난 21일 D 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이 영업이익에 연동된 위법 배당에 해당한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예고했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이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상법상 강행규정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소송 제기 시점은 동행노조의 투표 중지 가져본 결과 이후에 진행될 전망이다. 주주명부 열람은 삼성전자가 법무팀 법률 검토를 이유로 연기를 통보하면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운동본부는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ACT)와 연대해 명부 확보 즉시 기관투자를 결집하고 임시주총 소집 요구 등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동행노조의 법적 대응도 계속되고 있다. 수원지법은 가져본 신청 심문을 29일 열기로 했다. 투표가 이미 27일 종료돼 중지 효력은 소멸했으나 동행노조는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 본안 소송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합의안 효력정지 가져본 전환 여부가 주목된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담은 개정 상법도 변수다. 개정 상법은 임직원 보상 목적 자사주 보유에 매년 정기주총 승인을 요구하고 있어 삼성전자의 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이미 올해 3월 정기주총을 마친 만큼 이번 성과급 지급용 자사주 처분의 적법성이 추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파급력은 삼성전자에 그치지 않는다.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어 동일한 법적 쟁점에 곧바로 노출된다.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요구는 HD현대중공업(30%), LG유플러스(30%), 삼성바이오로직스(20%), 현대차·기아(순이익의 30%) 등 전 업종으로 번졌고, 요구 규모만 합산해도 10조 원 안팎에 이른다. LG전자 역시 영업이익 직접 연동 방식은 아니지만 법원이 ‘회사 이익 기반 대규모 성과급 지급’ 자체를 주주 의결 사항으로 판단할 경우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이재명 대통령, 3군 사관학교 통합 신속 추진 지시 /사진 뉴스
- ▲김민석 국무총리 “고품질 데이터 확보해 AI 3강 도약”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민주·개혁 진보 세력 더 결집해야”
-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자 “안전 예방에 재난관 리기금 집행 확대”

-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자 “서울마저 내주면 합리적 보수 소멸”
-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연내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